

남정집 : 행정학박사, EBS 교육방송강사, 서울신문명강사 소개, 시험출제위원, 부산대, 전남대, 한양대 전북대, 충북대 고시반 특강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정책학과 교수, 교무처장,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승진교수, 전주한빛고시학원, 에듀윌 전임, 대전이그잼고시학원, 노량진 아모르에듀고시학원, BS행정사 강의

행정학 개론

1. 개 요

2012년 지방직 7급 문제는 단순 암기문제와 추론을 필요로 하는 문제로 극명하게 분류하여 출제되었다.

추론능력이 부족한 수험생에게는 대단히 어렵게 느껴졌으리라 사료된다.

하지만 기본에 충실하고 단순암기가 아닌 이해와 사고를 가지고 준비한 수험생에게는 고득점이 용구되리라 본다.

출제경향으로는

- (1) 평소보다 지문이 다소 길어 시간안배에 어려움이 있어으리라 사료된다.
- (2) 기본서에 있는 기본이론을 통한 추론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
- (3) 기존 기출문제를 조합하여 출제되었다.
- (4) 보편적인 학자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 (5) 생각이 요하는 문제 즉, 개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문4번, 문11번, 문19번]
- (6) 옥의 티라면 다소 애매한 문제가 출제되어 시비거리소지가 다분히 있다.[문18번]

2. 출제경향 및 단원별 출제 분포도

참행정학 기본서와 문제풀이 그리고 핵심정리, 마무리특강으로 공부가 이루어진 수험생은 고득점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제가 강의 모두에 예측했던 비율로 출제가 되었다. 특히, 시사적인 이슈가 되는 분야, 또는 행정학회세미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분야에서 출제빈도가 높았다.

단원별	출제내용	출제경향
1편. 행정학 총설	신제도주의, 정책네트워크, NPS	기본이론에서 출제(15%)
2편. 정책학	정책결정모형, 정책의제, 티보가설,	보편적인 학자 묻는 문제 (20%)
3편. 행정조직론	조직구조론, 행정정보공개, 조직군 생태학	기본 이론에서 출제(20%)
4편. 인사행정론	부패, 국가공무원법, 근무성적평정제도, 타당도	법률과 관련한 기출문제에서 출제(20%)
5편. 재무행정론	예산분류, 예산집행	예산과정론에서 출제 (15%)
6편. 행정환류론	신축성유지방안	최근 개혁에서 출제(5%)
7편. 지방행정론	지방정부형태	기존 기출문제에서 출제 (5%)

3. 수험 대책

2013년 부터는 9급시험과 판이하게 다른 형식으로 출제가 될 걸로 사료된다.

고로 정부정책변화에 예의주시하면서 기본교과내용과 접목시켜 공부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하겠다.

틈틈이 신문을 구독하면 자연스레 감각이 생길거라 사료된다.

사회과학의 시작은 명확한 용어정리부터 라는 말이 진리이다

고로 동의어와 상대어를 구분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기본서에 충실하며 기본서에서 언급하지 못한 분야는 문제집을 통해서 보완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보편적인 학자는 단순암기하고 이론은 이해를 통한 추론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4. 효율적 학습방법

- (1) “하나를 알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라는 추론능력이 필요하다.
- (2) 최근 정부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3) 기존 기출문제를 분석한다.
- (4) 오답노트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5) 눈높이 강의를 선택하셔서 합격의 기쁨을 누리세요

<2012 하반기 지방 7급시험 행정학- B책형(2012. 9.22)>

문 1. 행정학의 접근방법 중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행정학.p.210]

- ① 제도가 수행하는 기능, 제도와 개인행태 사이의 관계, 제도의 성립과 변화를 설명한다.
- ② 행태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등장하였다.
- ③ 법과 공식적인 제도에 대한 정태적 서술에 초점을 두고 있다.
- ④ 역사적 제도주의는 정치행위자를 합리적 극대화론자라기 보다는 규칙을 준수하는 만족화주의자(satisficer)로 본다.

[정답③] ③은 구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참고> 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 비교분석

① 제도에 대한 시각

구제도주의에서 ‘제도’의 개념은 공식적으로 규정된 법률이나 정부구조와 같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반면,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공식적 규칙, 절차 혹은 규범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위를 이끄는 의미 구조(frames of meaning)를 제공하는 상징체계, 인지적 기초(cognitive scripts), 그리고 도덕적 틀(moral templates)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제도와 문화 사이의 개념적 구분을 와해시키며, 문화 자체를 제도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

신제도주의는 구제도주의와 마찬가지로 제도가 인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며 신제도주의와 구제도주의는 합리적 행동모형에 회의적이라는 점이 공통적이다.

② 연구방법론

- (1) 구제도주의(비환원주의)와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환원주의) 비교

	구제도	신제도
개념	공식적인 법령, 정부조직 등	공유하고 있는 규범, 규칙, 균형점

	가시적이고 구체적	상징적이고 포괄적
형성	외생적으로 결정 인간 → 제도	인간과 제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 인간 ⇔ 제도
특징	공식적·구체적·정태적·보편적	비공식적·상징적·동태적·문화적
분석 수준	거시수준	거시와 미시의 연계
분석 초점	제도의 정태적 기술(記述)	인간과 제도의 동태적(network) 관계를 분석

문 2. 조직군생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참행정학,p,509]

- ① 조직은 환경을 선택하는 능동적인 존재이다.
- ② 조직변화는 종단적 분석에 의해서만 검증 가능하다고 전제한다.
- ③ 조직이 생겨나고 없어지는 원인을 환경적 적합도에서 찾는다.
- ④ 전략적 선택이나 집단적 행동의 중요성을 경시한다.

[정답①] 자연선택적 관점으로 1970년대 중반에 새로운 조직이론으로 등장하였다. 조직환경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생물학의 자연도태이론을 적용함으로써 분석수준을 개별조직에서 조직군으로 바뀌어 놓은 것이다. 이 이론은 전략적 선택이나 집단적 행동의 중요성을 경시한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환경결정론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문 3. 관료제의 역기능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행정학,p,438]

- ① 머튼(Merton)모형은 관료에 대한 최고관리자의 지나친 통제가 관료들의 경직성을 초래한다고 본다.
- ② 셀즈닉(Selznick)모형은 권한의 위임과 전문화가 조직 하위 체제의 이해관계를 지나치게 분열시킨다고 본다.
- ③ 맥커디(McCurdy)모형은 계층제적 관료조직 내에서 구성원이 각자의 능력을 넘는 수준까지 승진하게 된다고 본다.
- ④ 골드너(Gouldner)모형은 관료들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 행태만을 추구하여 무사안일주의를 초래한다고 본다.

[정답③] ③은 피터의 법칙(Peter's law)이다.

조직의 상위 직급은 무능한 인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이론을 말한다. 미국 컬럼비아대 로렌스 피터 교수가 1969년 수백 건의 무능력 사례를 연구해 발표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조직의 모든 구성원은 자신의 무능력이 드러날 때까지 승진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상위 직급은 더 이상 승진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채워지게 된다. 결국 무능력은 개인보다는 위계조직의 메커니즘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 ① 파킨슨 법칙을 기초로 하여 수백 개의 역사적 사례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만든 원리이다.
- ② 무능력한 자도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다.
- ③ 계급제, 폐쇄형, 농업국가에서 발달하였다.
- ④ 이러한 무능력자의 승진 현상은 비과학의 적용이기 때문에 무능력자의 승진이 사라질 때 진정한 관료제의 효율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 ⑤ 조직 내 구성원은 '무능력 수준까지 승진한다.'는 계층제의 사회적 부작용을 지적한 이론이다.
- ⑥ 관료제의 병리현상이다.
- ⑦ 관료제 내의 승진으로 인한 관료의 무능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유능한 사람을 승진시키다 보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위치까지 승진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직위의 요청에 관한 한 그는 무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무능화된 사람도 신분보장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 머물게 되며 모든 계층이 이렇게 무능한 사람으로 채워질 수 있다.

문 4. 점증주의적 정책변동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참행정학,p,358]

- ① 수확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returns)
- ②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
- ③ 단절적 균형모형(punctuated equilibrium model)
- ④ 자기강화기제(self-reinforcing mechanism)

[정답①] 점증주의는 대폭적 변화가 아닌 소폭적 변화이다.

①은 수확체감의 법칙 [law of diminishing returns, 收穫遞減 - 法則]

수익체감의 법칙, 한계생산성 체감의 법칙(principle of diminishing marginal productivity) 이라고도 하며 재화의 생산에서 다른 생산요소들의 투입은 모두 일정하게 하고 어느 1가지 요소의 투입만을 증가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시점에 도달하고 나면 그이후로는 추가로 얻는 산출량이 차츰 감소하게 된다는 경제법칙.

초기의 경제학자들은 생산수단의 개선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상의 진보를 무시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수확체감의 법칙을 제시하면서 지구상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1인당 생산은 차츰 감소하게 되어, 결국 인구가 더이상 증가할 수 없을 만큼 궁핍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 생산의 기술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정체된 경제구조라면 이러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역동적인 경제구조하에서는 기술진보를 통해 수확체감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

②는 아주 작은 것에서 출발하여 어느 정도에 달하면 '극적으로 변화되는 순간'을 티핑 포

인트(Tipping Point)라고 합니다. 99℃의 물이 100℃가 될 때 불과 1℃의 차이로써 질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질적 변화의 순간이 티핑 포인트에 해당하는데, 번역하자면 '비등점 혹은 발화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합리모형과 유사

3가지 법칙으로는 가. 소수의 법칙은 열정적이고 영향력 있는 소수에 의해 전파가 이루어진다는 것, 나. 고착성은 전해지는 메시지가 흡인력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고착되어야 행동을 변하게 한다는 것, 다. 상황의 힘은 주변의 상황이 맞아떨어져야 잘 전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③은 생물학에서 단속평형이론(斷續平衡理論), 단절균형이론이란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종의 진화 양상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큰 변화 없는 안정기와 비교적 짧은 시간에 급속한 종분화로 이루어진다는 진화이론으로 합리모형과 유사

④는 순치이론으로 (self-reinforcement , 自己 強化)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강화를 스스로 선정하고 목표를 성취했을 때 정해진 강화를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스스로 행동에 대한 후속 반응을 관리하는 자기 강화는 자신이 강화제를 선택, 적용기준에 대한 결정, 후속 반응을 적용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강화제 제공자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목표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즉각적으로 강화를 제공함으로써 행동의 전이와 일반화, 지속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자기 강화는 자기 자신에게 강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덜 느낄 수 있는 제한점도 있다.

문 5. 아이스톤(Eyestone)이 제시한 정책의제 형성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행정학,p,317]

① 사회문제(social problem)는 개인의 문제가 다수로부터 공감을 얻게 되어 많은 사람들의 문제로 인식된 상태를 말한다.

② 공공의제(public agenda)는 일반대중의 주목을 받을 가치는 있으나, 아직 정부가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③ 사회문제(social issue)는 사회문제가 여러 가지 다른 견해를 갖는 다수의 집단들로 하여금 논쟁을 야기하며, 일반인의 관심을 집중하고 여론을 환기시키는 상태를 말한다.

④ 공식의제(official agenda)는 여러 가지 공공의제들 중에서 정부가 그 해결을 위하여 심각하게 관심과 행동을 집중하는 정부의제로 선별되는 상태를 말한다.

[정답②] 공공의제가 아닌 공중의제에 해당한다.

문 6. 정책네트워크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행정학,p,223]

① 사회학이나 문화인류학의 연구에서 이용되어 왔던 네트워크분석을 다양한 참여자들의 행위들로 특징지어지는 정책과정의 연구에 적용한 것이다.

② 행위자들 간의 연계는 의사소통과 전문지식, 신뢰, 그리고 여타 자원을 교환하는 통로로 작용한다.

③ 미국의 경우 정당과 의회중심의 정책과정 설명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등장하였다.

④ 이슈네트워크는 정부부처의 고위관료, 의원, 기업가, 로비스트, 학자, 언론인 등 특정 영역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이다.

[정답③] 엘리트이론, 다원주의, 조합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미국적 다원주의에서는 정책이슈별로 다양한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가 형성되며, 정

책커뮤니티(정책공동체, policy community)와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를 총괄하는 의미이다. 정책커뮤니티에서는 공식적인 결정권을 장악한 사람(관료)이나 전문가(교수나 연구원, 위원 등)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하위정부모형을 비판하고 등장한 이슈네트워크는 권력의 다원론과 상관성이 크다. 정책네트워크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며, 문제가 해결되면 해체된다. 다만, 정책커뮤니티가 이슈네트워크 보다는 전문가가 주도하며, 비교적 장기적으로 지속된다.

<참고>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

- ① 엘리트이론, 다원주의, 조합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등장하였으며 Policy Network를 넓은 의미로 볼 때 Iron Triangle(하위정부, 철의 삼각), Issue Network(이슈네트워크), Policy Community(정책공동체) 등이 포함되지만 이를 좁은 의미로 볼 때는 정책네트워크는 정책공동체와 구별된다(노화준, 정책학원론).
- ② 참여자 간 교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연계가 중요하고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가 있으며 정책형성뿐만 아니라 정책집행까지 설명하는 유용한 도구이다.
- ③ 정책네트워크에는 참여자들의 상호 작용을 규정하는 공식적 규칙이 존재하며 행위자들 사이에 나타는 상호작용의 패턴을 찾아내는 데 사용된다.
- ④ 정책네트워크 모형에 의하면, 국가는 자신의 정책 이해를 가지고 이를 정책과정에서 관철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행위자이다.
- ⑤ 정책공동체가 구성원들의 공유된 지식을 토대로 연결되어 있다면,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은 지식의 토대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접촉을 하도록 하는 어떤 유형의 '물질적인 이해관계'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다.
- ⑥ 정책커뮤니티에서는 시민의 참여가 있더라도 공식적인 결정권을 장악한 사람이나 전문가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 ⑦ 정책이슈별로 다양한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으며 정책 네트워크 유형에는 하위정부, 정책공동체, 정책문제망 등이 있으며 행위자들 사이에 나타는 상호작용의 패턴을 찾아내는 데 사용된다.

구분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
정책 행위자	공식적·조직화된 행위자에 한정 (공무원, 연구원, 교수, 위원 등) 폐쇄적·안정적·지속적	다양한 행위자, 이슈에 따라 수시로 변동(이익집단, 전문가, 언론, 비조직화된 개인 등 모든 이해관계자) 개방적·유동적
상호관계	상호협력적, 상호의존성 강함, 비교적 균등한 권력 Positive Sum 게임	상호경쟁적, 상호의존성 약함, 권력의 편차가 심함, 연합형성전략 Negative Sum 게임
참여의 목적	정책에 대한 기본적 이해의 공유와 협조(이해 공유도 높음)	자기이익 극대화 (이해 공유도 낮음) 이슈의 성격에 따라 이합집산
유형의 구조화	빈번한 상호작용, 안정된 구조적 관계로 유형화(언어, 가치관, 문화 등의 공유)	개별행위자들로서 특별한 구조가 미형성
정책결정	처음의 정책내용대로 정책결정 (예측의 용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내용 많이 변경 (예측하기 곤란)
정책집행	결정된 정책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음	결정된 정책내용과 다르게 집행되는 경우가 많음

문 7.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복잡한 정책상황에서 정책중재자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정책중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행정학,p,302]

- ① 다원주의 정책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정책행위자이다.
- ② 갈등상황에 있는 정책이해관계자들의 상호 정책학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 ③ 강력한 권위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중재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 ④ 정부는 공식적 권위를 지닌 정책중재자로서 가장 민주적인 역할을 한다.

[정답④]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볼 수 없다.

문 8. 덴하르트(Denhardt)의 신공공서비스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참행정학,p,232]

- ㄱ. 공무원의 반응대상을 시민보다 고객에 두고 있고, 정부의 역할을 공유된 가치창출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보는 점에서 뉴거버넌스이론과 유사하다.
- ㄴ. 전략적 합리성보다 기술적·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점에서 신공공관리론과 유사하다.
- ㄷ. 이론적 토대는 민주주의 이론, 실증주의, 해석학, 비판이론 등 복합적이다.
- ㄹ. 공익을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로 보고 법, 공동체, 정치규범, 전문성, 시민의익 존중 등 다면적 책임성을 강조한다.
- ㅁ. 공무원의 동기유발수단을 보수와 편익, 기업가 정신이 아닌 사회봉사 및 사회에 기여하려는 욕구에 두고 있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ㄹ, ㅁ
- ③ ㄴ, ㄷ, ㄹ
- ④ ㄷ, ㄹ, ㅁ

[정답④] ㄱ은 주인보다 시민에 두고, 뉴거버넌스와 다르다, ㄴ은 신공공관리론과 다르다.

<참고> 신공공서비스론

- (1) 방향잡기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부
- (2) 담론을 통한 공익의 중시
- (3)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
- (4) 고객이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봉사
- (5) 책임의 다원성

2.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Denhardt & Denhardt>

관 점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
인식의 토대	경제이론, 효율성 공리주의, 공공선택이론	민주주의이론, 공익 인본주의, 현상학, 포스트모더니즘
합리성	새 정치 행정 2원론(기업가정신)	새 정치 행정 1원론(시민정신)
역할	형평성 저해	처방성 제시못함
반응대상	고객	시민
정부의 역할	방향잡기	시민과 지역공동체 내의 이익을 협상하 고 중재, 공유가치의 창출
생산방식	개인 및 비영리기구를 활용해 정책 목표를 달성할 기제와 유인기제	동의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기 관, 비영리기관, 개인들의 연합체 구축
책임소재	시장지향적	공무원은 법, 지역공동체, 가치, 정치규 범, 전문적 기준, 다면성
행정재량성	기업가형정부- 재량행위확대	재량 + 제약과 책임 동반
조직구조의 역할	분권화된 조직	공유된 리더십을 갖는 협동적 구조
관료의 동기유발	기업가정신 정부규모를 축소하려는 이데올로기 적 욕구	시티즌십 사회에 봉사하려는 욕구

문 9. 매트릭스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행정학,p,498]

- ① 기능부서의 신속한 대응성과 사업부서의 전문성에 대한 필요에 의해 결합된 조직이다.
- ② 기능부서 통제 권한의 계층은 수직적으로 흐르고, 사업부서 간 조정 권한의 계층은 수평적으로 흐르게 된다.
- ③ 조직구성원은 동시에 두 명의 상관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가진다.
- ④ 개인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기술의 개발과 더불어 넓은 시야를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정답①] 신속한 대응성은 기능부서의 특성이 아닌 사업부서의 특성에 해당한다.

행렬 조직(Matrix Organization)은 기존의 조직체계 중에서 특정한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하나의 조직단위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조직단위에 걸쳐 관련되어 있을 때 전통적인 기능적 구조에 그 관련된 조직단위들로부터 대표자를 선정하는 프로젝트 조직을 화학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수직적 구조와 수평적 구조를 혼합한 새로운 복합 조직체를 말한다. 예로서 지역에 있는 영업점이 본사의 재무, 인사, 영업 등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한편으로 해당 지역의 본부장으로부터 지시·감독을 받는 조직을 말한다.

문 10. 국가공무원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거리가 먼 것은? [참행정학,p,775]

- ①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것
- ② 투표권 행사여부에 대하여 사적 견해를 제시하는 것
- ③ 특정 정당의 지지를 위해 서명운동을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 ④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정답②]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문 11. 근무성적평정 방법과 그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행정학,p,731]

- ① 행태관찰척도법은 도표식 평정척도법이 갖는 등급과 등급간의 모호한 구분과 연쇄효과의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 ② 중요사건기록법은 평정자인 감독자와 피평정자인 부하가 해당 사건에 대해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피평정자의 태도와 직무수행을 개선하기 어렵고, 이례적인 행동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될 위험이 있다.
- ③ 강제배분법은 평정자가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평정대상자를 각 등급에 분포시키고, 그 다음에 역으로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는 역산식 평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 ④ 체크리스트평정법은 평정요소에 관한 평정항목을 만들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질문 항목이 많을 경우 평정자가 곤란을 겪게 된다.

[정답②]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 중요사건 기록법은 피평정자의 근무실적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사건들을 평정자로 하여금 기술하게 하거나 또는 주요 사건들에 대한 설명구를 미리 만들고 평정자로 하여금 해당되는 사건에 표시하게 하는 평정방법을 말하며 피평자의 태도와 직무수행을 개선하기 용이하고 객관적 기법이기 때문에 이례적인 행동을 방지할 수 있다.

<참고> 중요사건 기록법(critical incident method) ; 근무평정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주요 사건을 기록하고 이를 중심으로 평정하는 방법

구 분	중요사건
()	일하면서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화를 낸다.
()	동료직원 돕기를 거부한다.
()	훈련받는 것을 거부한다.
()	동료직원이 상부지시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한다.

문 12. 정부조직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한 관리용통성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참행정학,p,649]

- ① 팀제
- ② 총액인건비제
- ③ 개방형 임용제
- ④ 실적주의

[정답④] ④는 과학적 관리법에 기초한 제도로 경직성, 소극성, 집권성이 나타난다.

문 13. 예산집행 시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 [참행정학,p,841]

- ① 조직별 분류
- ② 기능별 분류
- ③ 활동별 분류
- ④ 품목별 분류

[정답②] ②는 관리중심으로 재량행위가 확대된다.

● 예산분류의 목적 ●

특 징	해당 분류기준
총괄계정에 가장 적합한 분류기준	기능별, 조직체별
시민을 위한 분류에 가장 적합한 기준	기능별
국회의 예산심의회가 가장 용이한 기준	조직체별, 기능별
회계책임확보 및 재정통제가 가장 용이한 분류기준	품목별, 조직체별, 활동별
경제효과분석에 가장 적합한 기준	경제성질별
다른 분류방법과 병행되는 빈도	품목별, 경제성질별

문 14. 집중구매제도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행정학,p,922]

- ① 재정적 통제체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
- ② 긴급수요나 예상외의 수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 ③ 대량구매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
- ④ 일괄구매를 통해 구입절차를 단순화할 수 있다.

[정답④] 구입절차가 복잡하다.

● 집중구매와 분산구매 ●

구 분	집중구매	분산구매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규모 및 범위의 경제-대량구매의 이점 ② 전문화 ③ 경기조정 및 물가안정 ④ 부정이나 정실방지-재정통제 용이 ⑤ 긴급수요나 예상외 수요에 신속대응 ⑥ 공급자에게 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방중소기업 육성 ② 절차의 간소화 ③ 수요기관의 현지 실정에 적합 ④ 적기 공급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형식주의로 인한 구입절차 복잡 ② 지역사정에 둔감 ③ 적기를 상실 ④ 다양성 상실 ⑤ 대기업에 편중될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행정경비의 증대 ② 지역업체의 과잉보호 ③ 공무원의 부패가능성 ④ 전문성 축적이 곤란함

문 15. 예산의 신속성 유지방법 중 '정부조직개편'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참행정학,p,878]

- ① 전용(轉用)
- ② 이용(移用)

③ 이체(移替)

④ 이월(移越)

[정답③]

예산집행의 목표 : 재정통제와 신축성 유지

재정통제	예산안편성 지침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4월 말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포함하여 통보 	
	예산집행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중앙관서의 장이 설치운영 	
	예산회계기관의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장관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배정 :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을 통제 • 예산재배정 : 중앙관서의 장이 산하기관의 장을 통제 	
	예산배정의 유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을 통제 	
	장부기록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을 통제 • 중앙관서의 장이 세입징수관, 재무관/경리관(지출원인행위), 지출관/지출원(지출명령), 출납공무원을 통제 	
	정원 및 보수의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 : 국가공무원총정원령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예산편성시 사전 검토협의 및 협의	예비타당성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가 대규모사업에 대한 조사 및 검증(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 이상) • 경제적 타당성을 주로 검토, 타당성 낮으면 보류 • 대상사업 선정 :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 ㉡기획재정부장관 직권, ㉢국회의결 요구 	
	총사업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사업(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중앙관서의 장이 사전협의(총사업비 500억이상, 건축사업 200억 이상) • 총사업비 증가 등 일정 요건발생시 타당성을 재조사 	
	타당성 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가 사업타당성을 재조사 • 재조사 사유 : ㉠총사업비 20%이상 증가, ㉡수요예측치가 30% 이상 감소, ㉢국회의결 요구 	
신축성 유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과목(장·관·항)의 항목변경 • 국회의결 받은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얻어 이용
		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과목(세항·목)의 항목변경 • 국회의결은 받지 않으나(사전의결원칙의 예외),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 얻어야 함 • 전용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나타내고 이유를 기재 * 이용과 전용 : 한정성원칙의 예외(목적외 사용)
		이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이 변동시 예산도 변경시키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것(이체시 대부분 예산의 이용 또는 전용을 수반) •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함
예산의 이월	명시이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출미확정 예측가능, 사전의결 • 재이월 가능
	사고이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출미확정 예측불가, 사전의결원칙 예외 • 재이월 불가능 • 예산성립후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당초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그 부대경비에 대해서 인정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 •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5/100 * 이월 : 한정성원칙의 예외(회계연도 경과)
예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금액 •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100 이내의 금액(목적예비비는 별도계상) • 예비비관리자 : 기획재정부장관 •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반예비비 : 일반목적 ② 목적예비비 : 특정목적(보급, 공공자금, 급량비 부족액, 재해대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 사용목적 을 지정할 수 없음 ③ 예비금 : 독립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적 독립성 보장위한 예비적 경비, 독립기관장의 승인 하에 지출 • 한정성원칙의 예외(초과지출), 사전의결원칙의 예외(구체적 사용시) 	
계속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의결을 얻은 후 수년에 걸쳐 지출하는 예산 • 연부액은 매년 별도의결 • 체차이월 : 연도별 연부액 중 미지출금액을 차례차례 이월 • 민간과 총공사금액으로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계속계약제도 : 총공사금액으로 계약하지 못하고 총공사금액으로 입찰만 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 	
국고채무 부담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가 예산확보없이 미리 채무를 지고 다음연도 이후에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로서 채무를 체결하기 전에 미리 국회의결 얻음 *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 총액범위 안의 것은 제외 • 채무부담권한만 부여한 것이므로 다음연도 이후의 채무부담(실제 지출)에 대해서는 별도의결 • 한정성원칙의 예외(연도경과금지) 	

총액계상 예산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액규모만을 정하여 예산에 반영시키는 사업 대상사업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하천치수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그 밖의 대규모 투자 또는 보조사업 총규모 : 매 회계연도 예산의 순계를 기준으로 100분의 3 이내 		
신축적 자금관리	재정증권 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정관이 발행하는 1년 미만의 단기증권 	
	한국은행 차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 	
	국고여유 자금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기간 지출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자금을 사용 	
기타 집행상 신축성제도	추가경정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예산 의결후 변경하여 편성한 예산 편성시기, 회수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편성요건은 제한 	
	수입의 특례	지난연도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정성원칙의 예외(연도경과)
		과오납금 반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상적 수입이 아님
		선사용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입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먼저 사용하고 다른 지출금으로 대체납입
		수입 대체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과수입을 납입하지 않고 직접 및 수반경비에 초과지출 통일성원칙, 완전성원칙 예외 * 정부기업 : 수입금마련지출
	지출의 특례	관서 운영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납공무원에게 배정
		선금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리 지급, 금액 확정
		개산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리 지급, 금액 미확정
		지난연도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정성원칙의 예외(연도경과)
		지출금의 반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상적 지출이 아님
	신축적 예산배정	수시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배정과 관계없이 수시로 배정
		긴급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배정
		당겨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건변화로 해당사업을 미리 배정
조기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배정계획 자체를 앞당김 	
조상충용 (繰上充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비부족으로 다음연도 수입을 앞당겨 사용 지방의회 의결 및 감독기관 보고, 재정진단 대상 		

문 16. 부패의 유형과 그 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행정학,p,783]

- ① 회색부패는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동요를 막기 위해 관련 공직자가 문 제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 ② 제도화된 부패는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소위 ‘급행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 ③ 일탈형 부패는 무허가업소를 단속하던 단속원이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 업소에 대해 단속 을 하지 않는 것이다.
- ④ 개인부패는 공무원 개인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금을 횡령한 것이다.

[정답①] ①은 백색부패에 해당한다.

<참고> 국민들의 시각(관용도 기준)

- ① 백색부패(白色腐敗) : 이론상으로는 일탈행위로 규정될 수 있으나 구성원의 다수가 어느 정도 용인하는 부패를 말한다, 선의의 부패로서 용인할 수 있는 관례화된 부패, 떡값과 같 은 관행으로 치부하는 행위
- ② 흑색부패(黑色腐敗) : 사회체제에 명백하고 심각한 해를 끼치는 부패로 구성원 모두가 처 별을 원하는 부패를 말한다(수뢰행위).
- ③ 회색부패(灰色腐敗) : 사회체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부패로서 사회구성원 가운데 일부 집단은 처벌을 원하지만 다른 일부 집단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 우의 부패를 말한다. 과도한 선물의 수수와 같이 공무원 윤리강령에 규정될 수는 있지만, 법률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문 17. 티보(Tiebout)의 ‘발로 하는 투표(voting with feet)’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참행정학,p,372]

- ①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한다.
- ② 분권화된 체제에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재원은 지방소비세가 되어야 한다.
- ④ 지역재정프로그램의 혜택은 그 지역주민만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정답③] ③이 아닌 배당수입에 의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참고> 티보가설의 전제조건

- 1. 완전한 정보 : 모든 지방정부의 공공재와 조세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주민이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 2. 시민의 이동성 : 시민은 자신의 선호에 맞는 지방정부에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야 함
- 3. 다수의 지방정부 :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수가 많을 것
- 4. 배당수입에 의한 소득 : 모든 시민은 배당수입(dividend)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함
- 5. 외부효과의 부존재 : 공공서비스로 인한 외부경제나 불경제가 없을 것
- 6. 고정적 생산요소의 존재 : 모든 지방정부는 최소한 한 가지의 고정적인 생산요소를 가지며, 이 러한 제약으로 인하여 각 지방정부는 최적규모를 추구하게 된다. 최적규모란 최저평균 비용 으로 지방공공재를 생산할 수 있는 인구규모를 말한다.
- 7. 최적규모의 추구 : 모든 지방정부는 최적규모를 추구하며, 최적규모보다 적은 지방정부는 평 균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더 많은 주민을 유입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최적규모보다 큰 지 방정부는 반대로 주민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최적규모에 있는 지방정부는 현행 인 구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문 18.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행정학,p,1063]

- ① 기관대립형은 이원적 구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
- ② 기관통합형은 기관대립형과는 달리 지방의회만을 주민 직선으로 구성한다.
- ③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일본, 독일이다.
- ④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면서도 단체장의 지위를 강화 하였다는 특징을 가진다.

[정답③] 이 문제는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지만 보편적으로 보았을 때 ③번이 정답에 가까워 보인다.

이문제의 접근방식은 2가지로 분류해야 한다.

첫째는 기관통합형은 내각책임제국가에서 발달하며, 기관대립형은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나타나므로 대표적인 국가는 일본이 아닌 프랑스와 독일을 들 수 있다.

둘째는 기관대립형은 영미법계가 아닌 대륙법계에서 나타나므로 이때에는 일본도 해당한다, 이문제의 핵심은 “대표적인 나라”는 일본이 아닌 프랑스와 독일으로 집행기관 간선형에 해당한다.

문 19. 측정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참행정학,p,710]

- ① 추상적 개념과 측정지표 간의 일치 정도를 구성개념 타당성이라 한다.
- ② 어떤 개념의 측정지표와 이미 타당성이 검증된 다른 기준과의 상관성 정도를 내용 타당성이라 한다.
- ③ 측정지표가 지표의 모집단을 대표하고 있는 정도를 기준 타당성이라 한다.
- ④ 같은 개념을 상이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그 측정값 사이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차별적 타당성이라 한다.

[정답①] ②는 기준타당성, ③는 내용타당성 ④는 수렴타당도이다.

<참고> 타당도

- 1. 수렴타당도(집중타당도) : 같은 개념을 상이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그 측정값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 그 측정지표는 타당도가 높게 나타남.
- 2. 차별적타당도(판별타당도) : 서로 다른 이론적 구성개념을 나타내는 측정지표들 간의 상관관계가 낮은 경우 그 측정지표는 타당도가 높게 나타남.

문 20.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행정학,p,583]

- 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는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해야 한다.
- ② 유비쿼터스(ubiquitous) 정부의 실현은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실질적 구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③ 행정정보공개 확대는 공무원의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행태를 조장한다.
- ④ 정보공개청구제도는 특정 청구인을 대상으로 한다.

[정답③]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태를 조장한다.

<참고>정보공개의 역기능과 대책

역기능	대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의 형평성 저해 •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 • 산업스파이 목적 또는 범죄자에 의해 악용될 우려 • 정보공개로 신원노출을 꺼려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제보를 기피할 우려 • 정보공개 준비 및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 • 정보공개청구의 쇄도로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적체 우려 • 책임회피를 위하여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안의 문서화 기피 우려 • 행정정보공개는 행정책임과 관련하여 정보의 조작 또는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밀, 개인정보 및 산업스파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의 공개대상 제외 • 정보공개에 따른 업무량 및 비용 증가는 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불가피한 부담으로 인식 • 정보공개시스템의 효율적인 설계·운영 • 정보공개 전담창구 설치·운영 및 전담인력의 배치 • 중요한 행정활동을 의무적으로 문서화하도록 하여 문서화 기피현상을 억제